

지역 트렌드, 전북 2027

LOCAL TRENDS, JEONBUK 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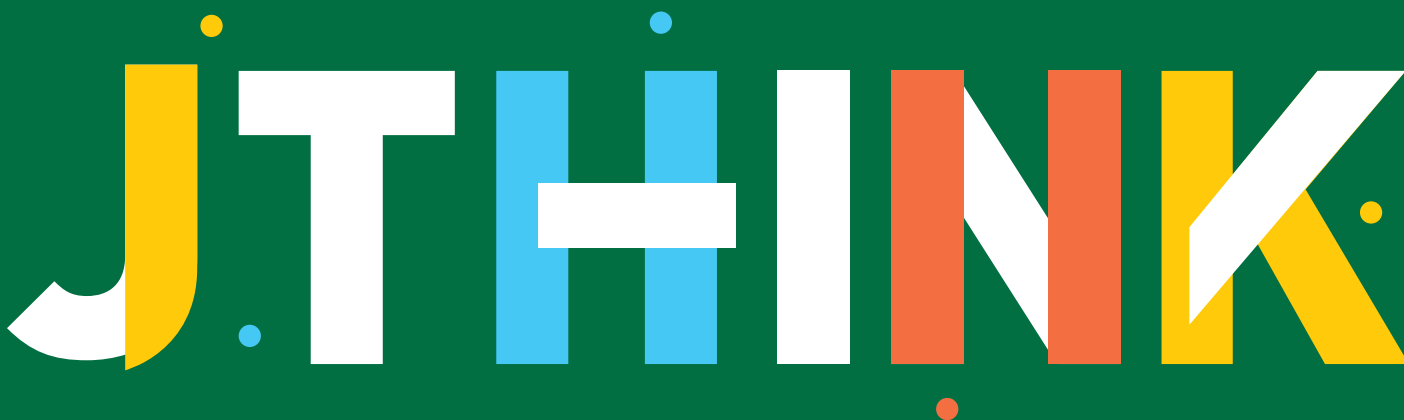
연구책임

장세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

박자경 연구위원

이지선 연구위원



'특별'의 인플레이션

1B

Beyond 'Special'

'특별'이라는 이름이 더는
차별성이 아니게 된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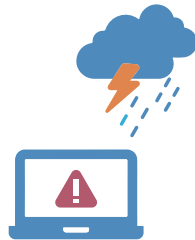
신규 특례 발굴과 법개정,
실행으로 특별함 증명해야

신흥 위험

2E

Emerging Risks

안전하다고 분류했던 것들이
위험 목록에 오른다.



늘 있던 날씨, 농사, 전기,
알고리즘이 새로운 위험으로

지역 러브콜

3L

Local Love Call

사람·기업을 건 생존 쟁탈전,
부르는 힘과 남기는 힘



인구·기업 유치 경쟁
지키는 힘 필요

지역 옵티멈

4L

Local Optimum

최저 보장에서 적절한 삶으로,
기본의 눈높이가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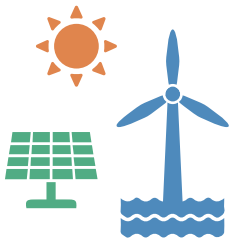
최저 생활보장에서
도민의 적절한 삶으로

자원 주권

5W

Who Owns
the Resour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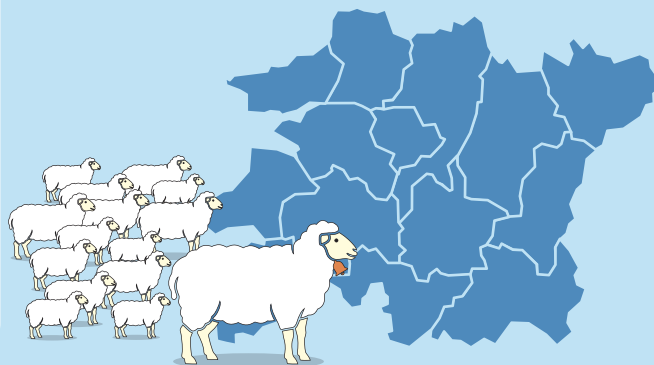
햇빛·바람·물, 데이터·문화까지
이익의 주인은 주민이다.



자원 이익은 주민에게
산업 안보의 문제

LOCAL TRENDS, JEONBUK 2027 BELLWETHER

벨웨더는 무리를 이끄는 양이자, 시장과 정책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선행지표.
전북은 변화를 먼저 겪는 지역, 뒤쳐진 사례가 될 것인가, 앞서는 선례가 될 것인가.
2027년, 전북은 방울을 달 것인가?



앙코르 커리어

6E

Encore Career

고령화의 부정적 언어가 아닌,
인생 2막의 재설계



쏟아지는 은퇴자,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재배치

지역 캐피탈리즘

7T

Tangible Growth

일회성에서 축적되는 자본으로,
지역이 투자주체가 되는 체감성장



지표가 아니라 도민 통장으로
확인하는 체감성장

Medi 융합

8H

Health in Everything

식품·콘텐츠·관광·돌봄
모든 분야에 메디컬이 붙는다.



메디컬 푸드, 디지털 치유
치유서비스 등 결합

마이너 라이징

9E

Edge to Center

시아 밖에 있던 주체가
산업과 소비의 전면에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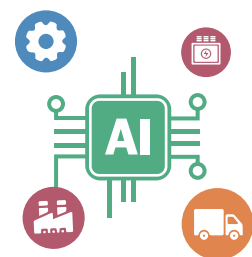
마이너 부상을 먼저 읽는 지역이
다음 시장을 갖는다.

AI 넥서스

10R

Rewire or Relic

사슬 하나로 연결되지 않으면
주력산업은 유물이 된다.



AI 골든타임, 전력·용수·부지·
인재를 한 줄로 꿰야 한다.

지역 트렌드, 전북 2027

B · E · L · L · W · E · T · H · E · R

- 벨웨더(bellwether)는 목에 방울을 달고 무리를 이끄는 길잡이 양을 말하며, 시장과 정책의 방향을 미리 알려 주는 선행지표를 뜻한다.¹⁾
-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고령화·에너지·기본소득·특별자치 등 여러 변화를 한국에서 앞서 겪는 지역이다. 시대 변화를 먼저 겪는 지역은 뒤쳐진 사례가 되거나, 길을 내는 선례가 된다.
- 2027년 정미년(丁未年, 양의 해), 전북은 시대 흐름(트렌드)을 이끄는 방울을 달 것인가? 뒤쳐진 사례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키워드		트렌드	한 줄 정의
B	Beyond 'Special'	‘특별’의 인플레이션 (Inflation of 'Special')	잇따른 통합특별시·특별법, 전북의 ‘특별’이 상대화되었다
E	Emerging Risks	신흥 위험 (Emerging Risks)	안전하다고 분류했던 것들이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온다
L	Love Call	지역 러브콜 (Local Love Call)	사람·기업을 건 생존 쟁탈전, 부르는 힘과 남기는 힘
L	Local Optimum	지역 옵티멈 (Local Optimum)	최저 보장에서 적절한 삶으로, 기본의 눈높이가 달라진다
W	Who Owns the Resources	자원 주권 (Resource Sovereignty)	햇빛·바람·물·데이터·문화까지, 이익의 주인은 주민이다
E	Encore Career	앙코르 커리어 (Encore Career)	고령화의 부정적 언어가 아닌, 두 번째 일자리 생태계
T	Tangible Growth	지역 캐피탈리즘 (Local Capitalism)	일화성에서 축적되는 자본으로, 지역이 투자주체가 되는 체감성장
H	Health in Everything	Medi 융합 (Medi-Convergence)	식품·콘텐츠·관광·돌봄, 모든 분야에 메디컬이 붙는다
E	Edge to Center	마이너 라이징 (Minor Rising)	시야 밖에 있던 주체가 산업과 소비의 전면에 선다
R	Rewire or Relic	AI 넥서스 (AI-Nexus)	사슬 하나로 연결되지 않으면 AI 골든타임을 놓친다

○ 지역 트렌드란?

- 지역 트렌드는 국가 수준의 트렌드와 달리, 지역이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환경변화와 정책방향을 말한다.
- ‘지역 트렌드, 전북 2027’에서는 지역 트렌드 중 전북 여건을 고려하여 전북이 주목할 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를 제시한다.
- 시간적 범위는 3년 이내 가까운 미래이며, 공간적 범위는 전북이다. 환경·산업 등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북 정책 전반에 적용하는 융합적·통합적 방향성을 제안한다.

○ 연구 방법

- (정량 분석) 부처별 종합계획 및 업무계획자료, 대통령 및 민선 9기 공약집, 국내·외 미래전망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 (정성 분석) 지역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자 전북연구원 내 분야별 박사를 대상으로 정책 트렌드 및 키워드 의견을 취합하였다.
- (트렌드 워크숍)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진 회의(7.16)를 개최하여 유사 의제를 통합하고 분야 간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전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할 16개 주요 트렌드(안)를 선정하였으며, 연구진 워크숍(7.29)에서 중요도, 시의성, 지역적 연관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10개 트렌드(안)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트렌드별로 각 분야의 박사가 배경과 대응방향을 작성하고 8~9월에 걸쳐 연구진 및 각 분야 박사가 최종 검토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였다.

1) 트렌드를 표현하는 키워드(bellwether)는 「트렌드 코리아」 형식을 참조하여 그해 띠 동물(2027년, 丁未年, 양의 해)에서 따온 10글자 두문자어로 선정하였고, 트렌드마다 영문 키워드 한 개, 한 줄로 압축된 정의를 추가하였다.

지역 트렌드, 전북 2027

B | '특별'의 인플레이션

- 전북특별법은 2023년 12월 131개 조문이 반영된 전부개정, 2026년 4월 32개 특례가 추가 반영된 일부개정을 거쳐왔다. 2026년 7월 인구 320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408개 조문으로 구성된 전남광주특별법을 들고 출범했다. 그 순간 전북의 '특별'은 상대화되었다. 통합특별시·특별법이 잇따르고, 초광역 중심의 5극3특까지, 특별자치도의 '특별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E | 신흥 위험

- 위험의 목록이 바뀌고 있다. 어제까지 안전하다고 분류했던 것들—늘 있던 더위, 익숙한 농사, 당연했던 전기, 편리한 알고리즘—이 위험의 이름으로 돌아온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영역으로 연쇄 전이되어 사회 기능 전체의 작동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다. 전북은 이 위험에 대비되어 있는가.

L | 지역 러브콜

- 사람과 기업을 자기 지역으로 데려오려는 경쟁, 호객행위를 방불케 한다. 인구도 기업도 제로섬이다. 뺏기면 지역이 죽고 데려오면 산다. 전북에서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생존이다. 인구감소가 심할수록 수단은 비슷해진다. 전북으로 더 불러올 특단의 전략은? 사람과 기업을 부르는 데 성공하고도 지역에 남기지 못하면, 그 예산은 다른 지역의 이사비용이 된다.

L | 지역 옵티멈

-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소득과 의료·교육·돌봄·주거·이동·일자리·여가 등 삶의 전 영역에서 도민의 적절한 삶(decent life)을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북은 이제 단순한 정책 실험을 넘어, 기본사회의 새로운 지역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W | 자원 주권

- 지역 자원의 사수전이 치열하다. 햇빛과 바람과 물에서 나온 이익의 주인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이다. 에너지만이 아니다. 마시는 물도, 데이터도, 문화도, 인재도 마찬가지다. 전력을 만들고도 팔지 못하고, 서해에서 건져 올린 유물마저 보관할 공간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보낸 전북에게, 자원주권은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다.

LOCAL TRENDS, JEONBUK 2027

E | 앙코르 커리어

- 고령화는 늘 '문제'로만 적혀 왔다. 65세 이상 26.61% 전국 4위, 이 숫자를 부담의 크기로 읽을지 자원의 크기로 읽을지가 갈림길이다. 은퇴를 퇴장이 아니라 두 번째 일자리 생태계로서의 재배치로 바꾸는 순간, 전북의 고령화는 새로운 성장기반이 될 수 있다. 은퇴자 역시 노동시장 및 지역사회의 능동적 주체로 살아갈 힘이 생긴다.

T | 지역 캐피탈리즘

- 보조금은 한 번 쓰면 사라지지만,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의 지분은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돌아온다. 도민은 지표가 아니라 통장으로 성장을 확인한다. 대기업이 들어온들 내 손에 쥐어진 게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받는 지역'에서 '갚는 지역'으로 바꾸지 못하면, 아무리 큰 투자가 들어와도 도민의 체감은 0이다. 일회성 보조금에서 축적되는 자본으로 대전환이 절실하다.

H | Medi 융합

- 메디컬은 더 이상 병원의 것이 아니다. 밥상에는 메디푸드, 화면에는 디지털 치유 콘텐츠가, 들과 숲과 바다에는 치유서비스가 붙는다. 농생명·산림·해양을 모두 가진 전북이 끝내 '의료가 약한 지역'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합하지 못해서다. 새로운 'Medi 전북'을 위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E | 마이너 라이징

- 여성 스포츠 시장, 이민사회로의 전환,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 직업계고등학교의 인기. 주류의 시야 밖에 있던 이들이 소비의 주체이자 산업의 수요로 올라서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마이너가 아니다.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서, 또는 핵심 소비주체로 주목해야 할 이들이다. 전북은 '평균이 아닌 집단'이 두꺼운 곳이다. 이 부상을 먼저 읽는 지역이 다음 시장을 갖는다.

R | AI 넥서스

- AI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전북의 농생명도, 탄소도, 상용차도 '한때 잘했던 산업'으로 기록된다. 이제 AI 경쟁력은 전력, 용수, 데이터, 부지, 인재가 하나의 사슬(nexus)로 결합된 복합 인프라에서 나온다. 전북의 전력·용수·부지·인재를 한 줄로 꿰지 못하면, 새만금 10GW는 남의 산업을 돌리는 발전소로 남는다.

I. ‘특별’의 인플레이션 (Inflation of ‘Special’)

“특별자치도의 ‘특별’이 상대화되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의

- 특별자치도의 차별성은 특별법에 담긴 특례에서 비롯되지만, 광역 간 행정통합(전남광주통합)에 따른 대규모 특례 패키지가 잇따라 신설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진 ‘특별’이라는 명칭 자체가 더 이상 차별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된 상황
 - 전북의 ‘특별’은 스스로 약해진 것이 아니라 외부 조건의 변화로 상대화된 것이며, 차별성은 확보한 특례의 개수뿐 아니라 부여된 특례의 성과로 증명. 특례 실행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

배경

- **(특별자치 경쟁 환경의 역전)**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인구 320만, 408개 조문)은 전북이 3년에 걸쳐 축적한 특례 규모를 행정통합 한 번으로 넘어서는 선례. 행정 통합이 단기간에 대규모 특례를 확보하는 유력 경로로 확립되면서, ‘특례 보유’ 자체의 희소성이 약화
- **(5극 중심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공간단위가 5극3특 체계로 이동. 전북은 3특 트랙으로, 인구 320만 초광역 단위와 172만 특별자치도 간 비대칭이 구조화된 가운데 산업·재정 투자가 5극에 집중될 경우 3특 소외가 현실화될 우려
- **(확보한 특례의 실행력 문제)** ‘특례를 몇 개 더 확보하느냐’도 중요하나, ‘확보한 특례를 얼마나 작동 시키느냐’도 중요. 추가 개정 추진과 병행, 기존 특례의 사업화율을 끌어올리는 실행력 제고가 없다면 초광역 통합 단위와의 격차 속에서 전북의 ‘특별’은 명칭으로만 남을 위험
 - (추진 체계) 특례의 사업화는 조례제정과 예산편성을 거쳐 소관부서가 수행하는데, 특례확보 성과가 사업부서 성과 지표나 예산 우선순위에 반영되는 장치가 없음. 확보된 특례는 재원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 위임형·계획 수립형 특례가 상당수로, 특례를 사업으로 옮기려면 지방비 소요와 부처 협의라는 부담이 부서에 주어짐. 그 결과 특례는 확보되어도 후순위 과제로 밀리거나, ‘특례-조례-예산-성과’의 연결이 특례별로 끊기는 문제가 발생
 - (농생명·식품, 실행이 앞선 분야) 농생명산업지구 6개소 지정 고시(익산 동물용의약품, 장수 저탄소한우, 순창 미생물, 남원 ECO스마트팜, 진안 홍삼한방, 고창 김치특화). 농촌진흥청·한국식품연구원·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농생명 연구·지원기관 집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특례가 지구 지정이라는 실물로 전환된 사례로 타 분야 확산을 위한 준거와 다각화 전략 필요
 - (환경)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일부 이양으로 4대 지구·단지의 협의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전북에 특화된 평가방법과 환경공간정보가 부족하고, 3년으로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는 권한 이양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 평가체계 구축과 평가 권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기 로드맵 필요
 - (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공적 관리,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보급사업 등 특례를 확보했으나, 특례 내용이 선언적 이어서 특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관광)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 6개 시군(진안·무주·장수·임실·고창·부안)이 선정됐으나, 기본구상 및 민간 사업시행자 발굴 단계에서 정체
 - (교육) 국제 K-POP학교 설립, 자율학교·IB 운영 등 개별 교육사업의 추진 특례를 마련했으나, 국제적 수준의 K-POP학교로 육성하기에는 특례가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 이양 의지도 부족. 도·교육청 간 사무이원화로 사업화와 성과 창출에 한계

대응
방향

- **(기본 방향)** 민선 9기 공약 연계 등 추가 특례 발굴을 통한 전북특별법 개정과 더불어, 확보된 특례의 실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병행해 ‘특별’을 명칭이 아닌 성과로 증명
- **(특례 성과관리)** 특례 성과지표를 이행 여부 중심에서 성과 전환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소관 부서-근거 조례-연계 예산-성과 전환 지표’를 특례 단위로 일람하는 특례이력추적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기적 공표. 성과 전환에 필요한 부처 협의·국비 소요를 특례별로 사전 식별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국가예산 건의에 반영하고, 성과 전환 실적에 연동한 부서 및 담당자 인센티브 제도화
- **(재정특례 우선 입법)** 후속 개정의 최우선순위를 ‘재원이 따라오는 특례’에 부여
- **(3특 트랙의 제도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2026.6.2. 공포)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설치가 확정(2027.1.1. 적용)되었고, 2027년 예산안에 2조 8천억 원 규모가 반영된 상황. 초광역특별계정의 3특 최소 배분 비율을 제도에 명문화하도록 3특 공동 입법 과제로 추진. 5국 대비 3특의 투자 격차를 정기 산출·공표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동법에 신설된 균형 성장영향평가와 연계해 구축하고, 협상근거로 활용
- **(행정체제 대응)** 전북형 광역·기초 행정체제 재설계 논의를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검토. 시군 자율 통합 지원 기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인접 광역과의 기능별 연합 등 다양한 선택지를 사전 검토 하고 도의 입장을 정립
- **(분야별 실행 전환)** 실행이 앞선 농생명을 준거로 타 분야의 사업화 전환을 확산
 - (농생명) 연구 및 지원기관을 지구별 기술지원 담당기관으로 연계하여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기업 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 규제 완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업경쟁력을 강화
 - (에너지) 햇빛·바람 연금, RE100 기업지원 등에 특례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출자 한도 특례, 전북 계통 확대 촉진을 위한 계통안정화 지원 특례 등 전북의 현안 문제 해결 중심의 실효성 있는 특례 확보
 - (환경)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디지털 정보공개로 신속성·공정성을 확보해 존속기한 내 성과 입증. 존속기한 연장 또는 상시 권한화를 전북특별법 후속 개정 과제로 포함
 - (문화·관광)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지구 연계 활성화 사업 추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규제완화가 실질적인 민간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대상 업종과 투자·고용 요건의 적정성 점검. 사업 규모와 운영 특성을 반영한 투자지원 및 기반시설 지원의 구체화 필요
 - (교육) 교육특례 실행을 위한 도·교육청 공동 추진체계와 교육부 사전협의 채널 구축



II. 신흥 위험 (Emerging Risks)

“전북은 새로운 위험에 대비되어 있는가”

정의

- 기후·에너지·기술·감염병·인구감소 등 서로 다른 영역의 위험요인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사건이 다른 영역으로 연쇄 전이됨으로써 사회 기능 전체의 작동을 위협하게 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
 - 늘 있던 더위, 익숙한 농사, 당연했던 전기, 편리한 알고리즘처럼, 어제까지 안전으로 분류되던 것이 위험의 목록으로 옮겨오는 것이 특징이며, 개별 부서·개별 재난 유형별 대응체계로는 대응이 되지 않음
 - 전북은 고령화율·농업 의존도·재생에너지 비중·의료취약지 분포가 모두 전국 상위권이어서 연쇄 전이의 출발점과 증폭 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는 지역, 조기 탐지와 통합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

배경

- **(위험의 재정의)** OECD 등이 기존 재난 틀로 못 잡는 ‘신흥 위험’을 정의하며 안보기준을 국가·영토에서 사람으로 이동. 식량자급률 47.9%(2024), 국방 핵심소재 79% 수입 의존, 디지털 확대 등이 새 취약성을 만들며, 안보가 정부 전담에서 지자체 일상 행정과제로 내려옴
- **(기후 위기-전이의 출발점)** 전북의 폭염일수는 평년의 2.7배·집중호우 발생일수는 약 2.3배로 증가, 이에 폭우+폭염·산불+폭염 등 복합재해 급증. 65세 이상 26.61%로 기후재난 인명피해 취약계층 비율이 상위권, 동일한 재해도 더 큰 피해로 증폭되는 구조
 - (관광의 취약) 기후변화가 여행 시기·목적지·축제 일정·시설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 관광이 핵심전략인 전북에서 관광객 안전·시설운영 중단·축제 취소·매출 감소로 연쇄 전이될 위험
- **(밥상의 불안)** 에너지·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 리스크 증가,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 병해충·생리장애 피해 확산 등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성 심화로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
- **(에너지 빈곤)** 기록적 폭염과 혹독한 한파 등 일상화된 극한 기상으로 냉방·난방 등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에너지 빈곤 문제가 심화
- **(물과 오염)** 이차전지·데이터센터·스마트팜 등 확대로 용수수요가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심화로 용수공급의 시·공간적 불균형이 확대. 과불화화합물(PFAS)·미세플라스틱 등 신규 오염물질로 수질·수생태계 위험이 증가하며 수량·수질 문제가 연계된 복합 물재난 위험이 확대
- **(AI의 그늘)** 공공부문 AI 확산으로 침해사고·알고리즘 오작동·시스템 종속 위험이 커지고 신뢰성 및 안전성 문제가 대두. 행정 효율화 수단이 오히려 행정 중단 위험의 새로운 경로가 될 가능성이 큼
- **(이동의 중단)** 전북의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2021년(1,294건) 대비 25년(1,592건)에 약 23% 증가함에 따라 면허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수요감소로 공급 축소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자진반납을 한 어르신의 의료·돌봄 접근성이 붕괴될 위험
-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약화와 고립 위험 확대)** 1인 가구 증가와 농촌 고령자 돌봄 공백이 확대 되는 가운데, 청년층은 가족 외 사회적 교류 감소와 진로 불안·소진이 중첩되며 관계 단절과 사회적 고립 위험이 확대. 영유아기에는 과도한 미디어 노출에 따른 발달 및 상호작용 저하 가능성이 제기, 청소년기에는 디지털 과의존과 우울·자해·은둔 등 정신건강 문제가 결합. 즉, 생애주기별로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와 정서적 취약성이 서로 다른 형태로 발생

대응
방향

- **(기본 방향)** 개별 부서 및 재난 유형별 개별 대응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위험에 대응하려면 재난복구 중심에서 사전예측·회복력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통합 탐지체계)** 전북형 신흥위험 조기탐지·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부문별 위험지표를 개별 관리하지 않고 ‘연쇄 전이 경로’ 기준으로 통합 관리
- **(기후·농업 위험 대응)** AI 기반 기후재난 예·경보 통합 플랫폼과 취약지역 맞춤형 인프라 보강, 자연 기반해법(NbS) 활용. 기후적응형 농업용수 관리, 대체작목 전환,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기후 적응형 푸드테크로 식량기반과 농가경영 리스크에 동시 대응
 - (물관리·환경 감시) 댐·저수지·하천·농업용수 등 수자원을 연계하여 용수수급과 가뭄·홍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북형 통합 워터그리드 구축을 검토. 신종·잔류성 오염물질 상시 모니터링과 AI기반 예측·분석을 연계한 환경위험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수량·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물관리체계로 고도화
 - (식량·공급망 안보) 식량자급률과 핵심 자재 수입의존도를 도 위험지표로 관리하고, 농자재·에너지·핵심소재의 역내 비축과 대체조달 경로를 사전 확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연계 조기경보 체계와 공동 운영
 - (관광 기후위험) 시군별 관광자원·축제 기상 재해 노출도를 분석한 ‘전북관광 기후위험 지도’를 구축하고, 계절별 적정성 정보와 축제·시설 운영중단 판단 기준 및 대체 프로그램을 사전에 마련
- **(에너지 공급 안전망)** 청정에너지 거점으로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계통 안정성 확보, AI행정데이터 기반으로 폭염과 한파 취약가구를 사전 식별하는 조기경보체계 구축, 공동체 기반 에너지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분야 신흥위험 대응형 지원 상시화
- **(이동권 붕괴 대비)** 노선버스 공급중단에 대비해 시군별 비상 이동체계를 사전 설계하고,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과 대체 이동수단 보장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도화해 반납률 제고와 이동권 유지 동시 달성. 이동 중단이 의료·돌봄 접근성 붕괴로 전이되는 경로 조기 탐지
- **(AI·디지털 위험 관리)** 공공부문 AI침해사고·알고리즘 오작동·특정 시스템 종속 등을 신흥위험목록에 등재하고, 장애 시 수기 행정으로 복구하는 업무연속성 계획을 부서별로 수립. 알고리즘의 검증·기록·책임 기준을 사전에 마련
- **(생애주기별 관계회복과 복합위기 조기개입체계 구축)** 돌봄·정신건강·디지털 문제의 개별적·분절적 대응을 넘어,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고 위험요인을 조기발견·개입하는 통합 대응 체계가 필요. 영유아의 부모-아동 상호작용 지원, 청소년의 디지털 과의존 및 정신건강 통합 관리, 청년의 관계망 형성과 진로·정서 지원, 고령자 지역사회 돌봄과 사회참여 확대를 연계, ‘돌봄 공백·관계단절-사회적 고립-정서·심리적 위기’로 이어지는 위험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신흥위험 (Emerging Risks)

“전북은 새로운 위험에 대비되어 있는가?”



III. 지역 러브콜 (Local Love Call)

“뺏기면 지역이 죽고 데려오면 산다. 전북의 전략은 무엇인가”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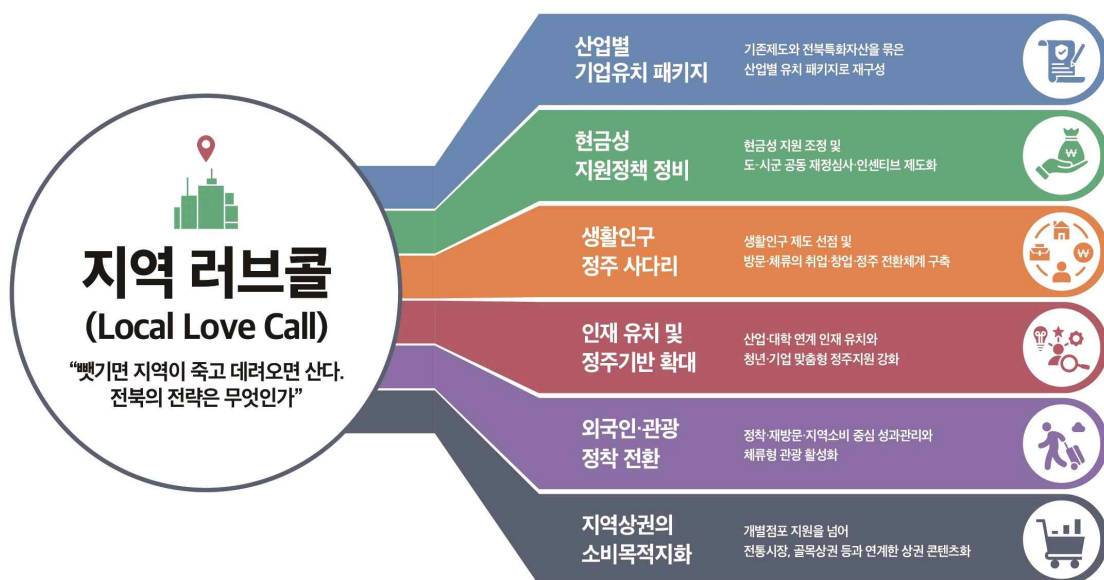
- 지자체가 인구·기업·관광객·인재 등 외부의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유치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 세제 혜택, 보조금, 행정 편의, 거주 공간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정책 행위
- 인구와 기업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 뺏기면 소멸하고 데려오면 존속하는 제로섬 구조이며, 인구감소가 심할수록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이 서로 닳아가 차별성이 소멸하는 수렴 현상이 동반
- 유치에 성공하고도 잔류·정주로 전환하지 못하면 투입 예산이 타 지역의 이사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전북에서 이 경쟁은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

배경

- **(경쟁의 보편화와 수단의 수렴)** 연 1조 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제 확대가 맞물리며 현금성 인센티브가 지자체의 보편적 정책수단으로 정착. 일본의 이주지원금, 유럽의 1유로 주택·디지털 노마드 비자처럼 인구감소가 심할수록 정책수단이 유사해지는 국제적 수렴 현상이 발생
- **(규모·성과 괴리)** 전국의 지역축제는 1,214개(2025)로 계속 늘지만 주민 참여율은 36.4%(2024)로 소비액과 함께 감소. 전입지원금은 인구 재배치·재전출 문제를 유발. 사업규모와 성과가 비례하지 않아 투입 확대만으로는 유치 경쟁에서 승산이 없음이 확인
 - (현금 인센티브의 한계, 도 전체로는 제로섬) 전입·정착·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인센티브를 시군별로 개별 운영해 단기 유치 경쟁만 심화되고 잔류·정주 효과는 제한적.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여건에서 이들 지출이 교부세 의존 재원으로 집행되나 잔류율·순유입 등 투입 대비 효과는 미검증이며, 인접 시군 간 경쟁은 도 전체로는 순증이 없는 제로섬 구조여서 도 차원의 조정 없이는 자원만 소진
 - (전북의 체류인구는 양·질 모두 평균 이하) 체류인구배수에서 전북은 밑에서 두 번째로 낮은 3.3배, 전국평균 4.3과 강원도 6.2에 비해 턱없이 낮음. 체류인구 주요연령 50~60대의 월평균 체류일수는 전국 3.8보다 낮은 3.1, 지방문율은 전국 43%보다 낮은 37.1%, 월평균 체류인구 인당 평균 카드사용액(11만7천원)도 전국에서 가장 낮음
 - (생활인구 정주 전환, 유치와 잔류의 분리) 전북특별법 생활인구 등록제 특례를 반영해 시범 실시를 준비 중이며 농촌유학·워크케이션·한 달 살기·축제 등 체류정책의 예산·사업은 확대. 그러나 체류자가 지역과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정주로 전환되는 경로는 여전히 취약
 - (외국인인구 뺏고 뺏기기) 지역특화형·광역형 비자 등 지역 기반 비자가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광역지자체 간 외국인인구 유치 경쟁이 심화. 지역특화형 비자 정착지원금이 시군별로 차등 지급되면서 같은 전북지역이더라도 현금성 인센티브가 많은 지역으로 외국인인구가 편중되는 양상
 - (관광 차별성) 축제·관광할인·반값여행·투어패스 등으로 유치경쟁에 참여하나 지역별 지원방식·콘텐츠가 유사해져 차별성 확보가 어렵고, 유치 관광객의 재방문·장기체류 전환 여부를 파악하는 체계도 미흡
- **(기금·기부금 경쟁)**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유입 성과 중심으로 평가·배분 개편(2027년 적용)되며 시군 간 격차 확대 전망(2026년 도내 우수 등급 장수군 1곳, 120억 원). 고향사랑기부금은 전국 1,515억 원(2025년) 중 전남 약 240억·경북 약 217억이 상위인 반면 전북은 모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해, 성과 기반 배분 전환이 곧 전북의 자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 **(소비방식 변화와 차별적 경험수요 증가)** 인구감소로 소비규모와 패턴이 변화하고, 지역 내 소비는 플랫폼·대형유통·온라인으로 이동. 로컬푸드·로컬브랜드·지역특화콘텐츠 등 차별화된 경험·소비에 대한 수요 증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지역 브랜드·상품이 지역 외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단순히 점포 수나 시설 규모가 아닌 지역 고유의 매력이 지역상권의 경쟁력으로 부상

대응
방향

- **(정책 방향 재설정)** 인접 시군 간 유치 경쟁은 도 전체로는 순증이 없는 제로섬 게임. 경쟁의 단위를 시군에서 도로 올리고, 정책 목표를 유치 실적에서 잔류·정주로 이동
 - (성과관리 전환) 유치실적 중심 지표를 잔류율·정착률·재방문율과 재정투입 대비 순유입 효과로 전환하고, 이를 도 차원의 공통 평가지표로 적용해 시군별 개별 경쟁을 관리
- **(현금성 지원정책 정비)** 시군 현금성 지원의 중복·과열을 정비하고 도 차원 조정기준을 마련. 신설·확대 시 재정영향과 인접 시군 파급을 함께 검토하는 도-시군 공동절차를 협약으로 제도화, 정비에 참여하는 시군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
- **(체류인구 질적 제고로 패러다임 전환)** 단순 체류인구의 양적 성장을 넘어 전북지역에 반복적 방문 또는 중장기 체류하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험과 경제활동을 하는 혁신 체류인구의 전북 내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로 인해 떨어진 지역내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높이는 전략 필요
- **(생활인구 정주 사다리)** 생활인구등록제 특례 및 시범사업을 선점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반영을 위한 대응논리 구축. 농촌유학·위케이션·한 달 살기→반복 방문→두 지역 거주→취업·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생활인구 정주전환 사다리' 설계
- **(산업별 기업유치 패키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기회발전특구·이전기업 세제 등 기존의 수단을 전북 특화 자산(재생에너지 직접공급, 농생명 원료 접근성, 실증 규제특례)과 묶은 산업별 유치 패키지로 재구성. 유치 성과를 기업 수가 아니라 신규 고용자 수·지역 내 협력사 비중 등으로 관리
- **(인재 유치 및 정주기반 확대)** 농생명·바이오·모빌리티·뿌리산업 등 산업수요와 지역대학을 연계해 대상 인재와 유치경로를 구체화하고, 청년농업인 패키지과 피지컬시 앵커기업 투자 연계 인력 정주 패키지, 전입인재 대상 자가취득 지원(이자보전·지분적립형·사택지원) 등 주거 정착기반 강화
- **(외국인·관광 정착 전환)** 유치 인원 중심의 성과관리를 지역 취업률, 장기 체류율, 가족동반 체류 비중 등으로 전환. 방문객 수 대신 재방문율, 체류시간, 숙박일수, 지역 소비로 평가하고, 유사 축제·할인 사업의 총량을 점검하며, 관광주민증·계절별 체류 프로그램을 연계
- **(지역상권의 소비목적지화)** 개별점포 지원이나 점포별 경쟁구조를 넘어 전통시장·골목상권·관광자원을 연계한 상권 콘텐츠화 추진. 상권 공동마케팅, 지역화폐, 명예도민제 등을 활용한 관계형 상권 구축. 축제-상권-로컬푸드(콘텐츠)-숙박관광을 하나로 연결하는 로컬브랜드 육성



IV. 지역 옵티멈 (Local Optimum)

“최저 생활 보장을 넘어, ‘적정한(decent) 삶’을 누리는 사회로 나아간다”

정의

- 국가의 최저(minimum)를 넘어 지역사회의 기본적 삶(decent life)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전환. ‘기본소득’과 의료·교육·돌봄·이동·주거·여가 등 ‘기본서비스’를 확충하고, 주민자치 ‘민주주의’와 ‘사회연대경제’ 방식의 ‘진짜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사회로 확장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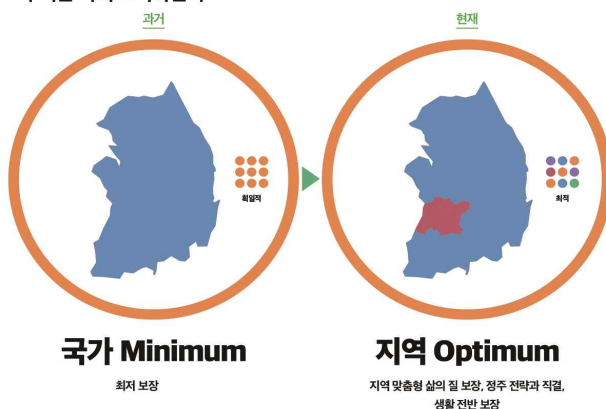
- (기본이 되는 삶의 수준) 다층적인 ‘소득’ 보장과 함께 기본적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가 결합한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사회 전환이 본격화, 지역사회통합돌봄·농어촌기본소득 등 지역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선도정책으로 사회 전반의 두툼한 사회안전 매트릭스를 갖추는 사회로 이행
- (기본소득 정책실험, 다음 준비) 전북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최다 지역(순창·장수·진안·무주)으로 이미 본사업화 궤도에 오름. 기본소득(지역화폐)를 매개로 한 지역별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본격화해야 함. 시장·정책실패로 지역사회 필요조차 충족되지 못하는 지역사회 생활전반을 사업·활동으로 조직화(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 방식)해 나가는 이른바 ‘기본서비스’ 실행전략이 관건
- (분야별 지역 맞춤 실행방식 관건) 지역사회통합돌봄, 농촌의료 공백, 이동권 차별화, 주거 이중격차, 기본교육 확대 등 분야별 국가 기준을 토대로 지역사회 필요에 맞는 실효적 기준 설정이 중요해짐
 - (통합돌봄 전면 시행) 2026년 3월 통합돌봄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되며, 시군 통합전담부서 설치와 실행 계획이 시행되고 있어 지역별 돌봄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돌봄정책 추진과 민관 연계형 통합돌봄전달체계 구축 필요
 - (농촌 의료 공백) 농촌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방문형 건강관리 지원 기반 마련 필요
 - (이동권 제도화) 행복콜버스·행복콜택시 등 전북형 DRT를 13개 시군에서 운영(2026년 약 123억 원), 국토교통부 「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 제정(2025.12)으로 제도화 단계. 이동권은 의료·교육·돌봄 접근성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옵티멈 설계의 기초 인프라
 - (주거 이중격차) 전북의 관리대상 빈집은 약 1.95만 호(2025),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은 40.5%(전국 2위). 빈집 증가 및 주택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한편, 청년층의 주거 부담도 높은 상황으로 지역 여건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전북형 주거기준 설정 필요
 - (교육의 재정지)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증가로 농산어촌의 돌봄·방과후·진로교육 접근성 격차 확대. 교육혁신 선도지역을 기반으로 학교를 지역 교육·돌봄 거점으로 전환하고, 통학·돌봄·문화·진로 서비스를 생활권 단위로 보장하는 교육 체계 중요
 - (먹거리 안전망) 고령화·인구감소에 따른 ‘식품 사막화’로 인구소멸지역의 식품 구매 접근성이 약화. 전북의 경우 생산 기반 지원에 비해 도민의 구매 접근성 보장은 상대적으로 취약
 - (기후 불평등) 기후위기 피해가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가 낮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이 심화. 타 시도는 지역 단위 보장 기준을 마련(예: 경기도 전 도민 온열·한랭질환 보장, 제주 야외근로자 지수형 보험 등)하고 있으나, 전북은 관련 기준 설정 미비
 - (소비시장 확보 한계) 인구감소, 고령화로 대형 상권·대형마트·대규모 상업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방식 한계. 지역의 인구·수요·자원에 맞춘 적정 규모의 생활상권에 대한 중요성 증가

대응
방향

-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화 준비)** 도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26년 4개군, '27년-추가예상)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층적 변화(소득·상권·사회·인구 등)를 분석하고, 농어촌기본소득 본사업화(2028년)에 대비 기본소득(지역화폐) 매개 지역순환경제의 구조적 작동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
- **(돌봄·이동 보장)** 개인별 지원계획 기반 통합돌봄의 실행력과 돌봄 인력 확보·처우 대책을 병행하고, 돌봄로봇·자율주행 DRT 등 피지컬AI 보급을 확대. 생활권별 운행횟수·대기시간 기준을 담은 '전북형 이동권 보장'을 조례화하고 분절된 DRT·벽지노선·특별교통수단을 생활권 단위로 통합
- **(적정한 주거·교육 지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원·빈집 활용·청년 공공임대 및 독립자금 지원을 전북 청년의 실제 수요 기준으로 설계. 교육혁신 선도지역·농촌학교 연계로 소규모학교를 교육·돌봄 거점으로 전환하고 농촌유학·이동수업·통학 지원 등으로 접근성 격차 해소
- **(생활권 연계 모자의료 기본보장)** 모자의료 접근성 판단 시 인구감소지역은 개별 의료기관 설치여부 보다, 임신 준비부터 난임·임산·분만·산후회복·신생아·영유아 건강관리까지 필수서비스를 지역에 관계 없이 보장하는 '모자의료 기본보장' 체계로 전환
 - 분만취약지역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우선 파견, 산후 회복·대기 숙소, 교통·이송 지원, 권역 거점 분만기관 이용비 지원 등을 패키지로, 보건소 또는 권역 단위에 모자건강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난임·고위험 임신·분만·산 후유증·신생아 및 영유아 발달관리까지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연계
- **(여가·일자리 보장)** 생활권별 문화·체육시설 접근시간 기준과 프로그램 최소 제공량을 마련하고, 연령 대별 일자리 참여 기회에 관한 기준을 설정
- **(생애주기 먹거리 돌봄 체계)**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등 생애주기 식재료·급식 지원과 식생활교육이 결합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체계 확립. 식재료+급식+배달식+공동체밥상+영양 관리+식생활교육이 결합된 '생애주기 먹거리 돌봄' 체계의 틀과 기준을 마련
- **(기후·환경 보장)** 전 도민 '기후안전보험' 도입과 고령 농업인·야외근로자에 대한 지수형 보장을 통해 전북형 기후복지 안전망 구축. 기후·환경서비스의 최소 보장기준 마련과 광역단위 공동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해소
- **(필수업종 사수)**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모든 점포를 동일하게 지원하기 어려우므로 소상공인 점포 수 유지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능 유지로 정책목표 전환, 주민 생활을 유지하는 핵심 업종을 선별 지원. 매출액이나 점포 수가 아닌 주민 이용률, 생활서비스 충족률 등으로 상권의 성과를 평가

지역 옵티멈(Local Optimum)

"최저 생활의 보장을 넘어 도민의 '적정한(decent) 삶'을 누리는 사회로 나아간다"



V. 자원 주권 (Resource Sovereignty)

“자원 주권은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다”

정의

- 지역이 보유한 에너지·인재·문화·생태·데이터·식량 등 유·무형 자원의 소유와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확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발굴·관리하고 그 이익이 지역에 남도록 하려는 흐름
- 자원 주권은 자원의 보유가 아니라, 햇빛·바람·물 등의 활용 결정권과 이익이 지역에 귀속·순환되는 것이 핵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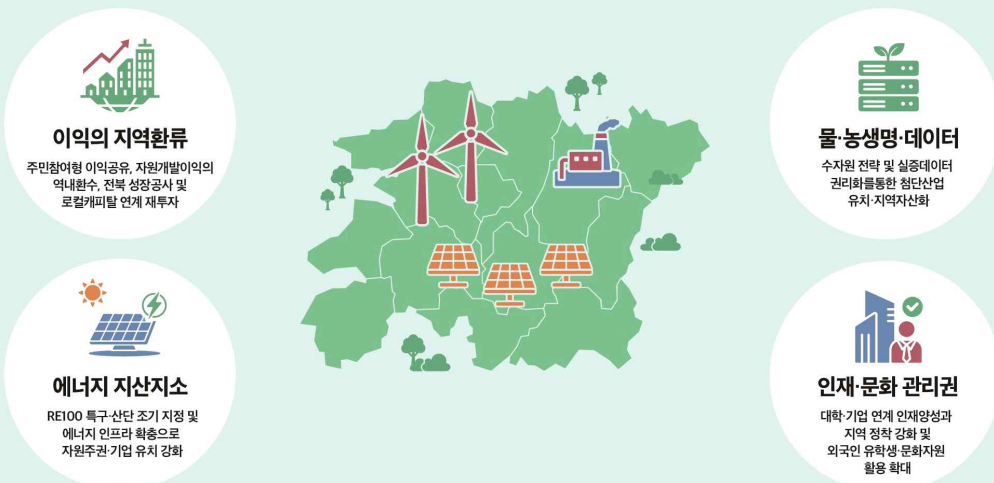
- **(자원의 주권화)** 핵심광물 수출 통제, 자원 민족주의 부활 등 광물·데이터·공급망의 통제권 경쟁이 국내·외적으로 강화되며, 자원의 보유보다 활용·결정권을 누가 갖는지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 에너지를 비롯하여 데이터·식량·인재·문화 자원의 가치가 외부로 이전되는 문제가 공통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전력 활용에 대한 생산지역의 권한이 확대되는 추세
-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괴리)** 전북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 최상위를 기록하나, 지역 내 직접거래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전력 생산과 소비의 구조적 분리가 심화. 지역의 송전망 인프라는 수도권 공급을 위한 통로로 전략, 막대한 송전비용 및 계통 포화 부담을 겪음
- **(물 배분 경쟁)** 용담댐·섬진강댐 등 수자원의 광역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첨단산업의 대규모 용수수요 증가로 지역 간 물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경쟁이 심화
 - 특히 AI·반도체 산업은 안정적 용수 확보가 핵심 입지조건인 만큼, 광역 물배분 과정에서 전북의 용수확보 역량을 강화하지 못할 경우 첨단산업 유치와 지역 산업경쟁력 확보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음
- **(농생명 부가가치 유출)** 높은 농생명 연구인프라 대비 낮은 지역 생산력으로 부가가치가 외부로 이전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천소재 발굴, 기술자원의 R&D·산업화를 도내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중심이 되어 지역화하는 것이 시급
- **(도외 유출로 빼앗긴 역사·문화 주권)** 전북의 앞바다에서 발견·인양된 고려시대의 수중유물이 도내 보존·수장·전시시설 부재라는 이유로 목포(국립해양유물연구소)로 전체 이관, 유물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지역이 자신의 역사를 해석하고 관광·교육자원으로 활용할 기회까지 상실
- **(국가적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보상 부재)** 전북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흡수량이 많은 지역. 즉, 전북은 갯벌·산림 등 풍부한 생태자산과 탄소흡수원을 보유하여 다른 지역의 온실가스 흡수하는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나, 이에 대한 보상 없이 탄소흡수원 보존 의무만 부여
- **(인적 자원의 유출 심화)** 청년의 도외 전출 사유 1위는 직업(39.9%)이며,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24.3%)이 전국(14.1%)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2025), 지역기업 취업 연계 미흡. 청년 인력의 양성 비용은 전북이 부담하고 숙련의 결실은 타 지역이 가져가는 인재 자원의 유출 심화
- **(데이터의 지역 자산화)** 협업지능·피지컬AI 실증기반을 구축 중이나 실증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지역 자산화 체계는 미비. 실증 부지·비용은 전북이 제공하고 데이터 권리는 외부 기업에 귀속되는 구조가 반복되면 에너지·농생명에서 겪은 유출이 데이터 영역에서 재현

대응
방향

- **(자원주권 거버넌스 구축)** 도내 자원별 관리원칙 및 방향을 정립하고, 도내 활용률, 이익환류율, 역외 유출도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자원별로 분산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도 단위 통합 관리·조정 체계 마련
 - (자원보호를 위한 특례·권한 확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으로 전력 직접거래 권한을 확보하고, 전북특별법 후속 개정에 에너지·데이터·농생명·문화자원·인재 등 지역 자원의 관리·활용 특례 법제화
- **(이익의 지역환류)** 주민참여형 이익공유(햇빛·바람연금), 자원개발이익의 역내 환수, 전북성장공사 및 로컬캐피탈 연계 재투자로 '결정권과 이익의 지역 귀속' 실현
- **(에너지 자산지소)** RE100산단 조기 지정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북기업에 우선 공급하는 자산지소형 에너지 자원주권 확립. 이를 통해 AI 및 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첨단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잉여전력을 열과 수소 등으로 전환해 전북의 또 다른 자산으로 활용
- **(농생명·데이터)** 미생물·종자 등 특화된 핵심 소재를 발굴하여 고유자산으로 권리화하고, 피지컬AI 실증 데이터를 지역 자산으로 확보해 '부지·비용은 전북, 권리는 외부' 구조를 차단
- **(인재 관리)** 대학·기업·지역 인재양성체계를 구축, 도내 잔류율로 성과지표로 설정하되, 유출이 집중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관리. 외국인유학생(D-2)·졸업생(D-10) 대상 지역기업 취업매칭플랫폼 구축
- **(역사자원 주권)** 전북 앞바다 해양유물의 도내 보존·연구·전시를 담당할 국립시설(예: 태안반도 해양유물을 위한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건립)을 국가유산청 과제로 추진. 확보 유물은 해양문화 콘텐츠·교육프로그램·관광코스로 연계해 '해석권'까지 지역에 귀속
- **(물 배분 결정권)** 미래 물수요와 산업 변화 반영한 「전북 수자원 전략」을 수립, 용담댐·섬진강 수계의 광역 물배분 과정에서 전북의 참여 지위 확보와 물배분 요구의 제도적 근거를 강화. 특히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중장기 용수수요를 사전에 예측, 산업 유치에 필요한 용수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
- **(생태·순환·공급망)** 기업·주민의 참여와 이익공유로 자원활용 부가가치가 지역에 축적되는 구조 마련
 - 민관 협력으로 숲·갯벌·내륙습지·농지·하천·유흥지를 생태적으로 복원·연결하여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그린인프라 생태복지공간으로 자산화하고, 탄소 흡수 등 국가적 기능에 따른 보상에 관한 특례를 발굴하여 전북특별법 개정
 - 폐배터리·영농폐기물·바이오매스의 회수순환이용·산업화를 연계한 지역자원 공급망을 구축

자원 주권(Resource Sovereignty)

“전북에게 자원주권은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다”



VI. 앙코르 커리어 (Encore Career)

“고령화라는 부정적 언어가 아닌, 두 번째 일자리 생태계”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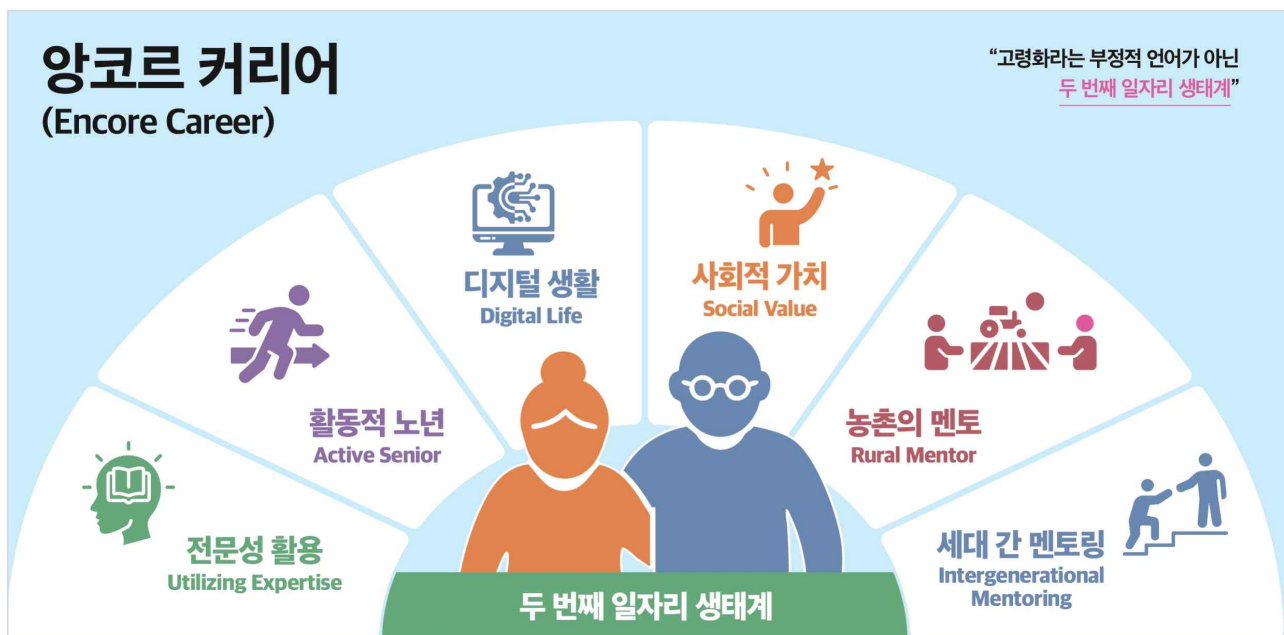
- 은퇴가 새로운 직업 정체성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에서, 축적한 경력·전문성을 사회적 가치와 결합하여 제2의 일자리를 갖고, 학습·스포츠·여가·공동체 활동을 통해 활동적인 노년을 영위하는 흐름. 고령층이 복지 수혜자에서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의 능동적 주체로 재정의되는 현상
 - 은퇴를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장이 아니라 제2의 인생 설계로서의 재배치로 전환하는 관점의 이동
 - 전국 4위의 고령화율이라는 동일한 수치를 부담의 크기로 읽을 것인지 활용가능한 자원의 크기로 읽을 것인지가 전복의 고령화 대응 전략을 가르는 갈림길

배경

- **(노년의 재정의)** WHO는 활동적 노년(Active Senior)에 이어, 건강노화 10년(2021~2030)을 통해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건강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였고, 국제사회는 고령자를 보호 대상이 아닌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으로 인식
 - 국내는 2025년 65세 이상 비중 21% 돌파로 정년·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공백 해소가 과제로 부상, 정부는 노인 일자리를 소득 보전형에서 역량 활용형으로 전환하며 2026년 115만 2,000개 제공 계획
 - (활동적 노년의 일상)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식 회원은 2025년 약 23만 명으로 2022년(약 10.7만 명) 대비 약 2.16배 증가 및 전국 파크골프장도 552곳으로 확대. 노년층의 디지털 건강관리 확산과 함께 일·여가·건강이 결합된 활동적 노년의 생활양식이 형성, 고령층이 소비와 활동의 주체로 전환
- **(공익형에 갇힌 일자리)**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이 공익활동형에 편중,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제공하면서도 지역 산업 연계형 직무 재설계는 미흡. 인력난과 유휴 경력인력이 공존하는 미스매치 상태로, 지역 내 경력보유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핵심과제로 부상
 - (끊기는 숙련 승계) 고령 농업인의 은퇴·영농 승계 문제가 가시화되나 노인 일자리가 단순 공익활동에 편중돼 고령 농업인·베이비부머의 숙련 경력 활용이 부족
 - (탄소중립과 고령 일자리) 탄소중립 전환으로 농업·전통제조업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위험이 크지만, 모니터링·교육·시설관리 등 고령층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일자리 잠재력도 큼. 전환의 피해자로 남기지 전환의 인력으로 재배치할지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
- **(은퇴 이후 일자리수요 증가)**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평균 53세이나, 최종 은퇴 희망 연령은 약 73세로 퇴직 연령-근로수요 간 괴리 발생 및 약 20년의 추가적인 일자리 수요 존재
- **(산업전환에 따른 직무구조 급변)** AI·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제조업 고도화, 서비스산업 전환 등으로 지역산업 직무구조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재직자 및 은퇴자는 기존 산업에서 축적한 경험만으로는 새로운 직무에 바로 진입하는데 애로 발생
- **(고령친화산업 지연)** 고령인구의 증가와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로 인해 실버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기반과 실증기관 부재로 미래신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칠 위기. 전복을 테스트베드로 한 국가차원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필요

대응
방향

- **(축적된 경력 인프라 설계)** 전북 신노년의 경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역 산업 수요와 매칭하고, 전북 성인 진로교육 설계로 은퇴 이후 커리어를 사전에 설계
 - (앙코르 직무 설계) 돌봄·안전·교육·관광·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전문 직무 개발. 예를 들어, 농촌형(농촌멘토·마을관리인·영농대행·치유농업), 관광형(지역스토리텔러·탐방안전·관광안내·마을호스트) 직무를 경력과 활동 강도를 반영해 개발하고 관광사업체·축제 수요와 잇는 매칭체계 구축
 - (은퇴자 멘토링) 은퇴자를 외국인근로자·유학생·이민가정의 직장·지역 적응을 지원하는 멘토로 양성하고 활용하여 은퇴 이후 사회참여를 촉진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사회통합 제고
- **(소득 공백 대응)**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사이의 소득 공백에 대한 도 정책 마련. 도내 기업의 계속 고용·재고용 전환을 지원하는 인건비·컨설팅 패키지를 마련함으로써 공공 부문부터 정년 이후 직무 재설계 모델을 시범 적용. 앙코르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소득공백보전 관점에서 설계
 - (연금·자산 관리 서비스 연계) 은퇴 전후 소득·자산 설계 상담을 성인 진로교육 과정에 결합
- **(전북형 고령 일자리 창출)** 전북의 산업과 연계한 전북형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발굴
 - (전북형 그린잡) 정의로운전환기금을 활용해 하천·생태 모니터링, 에너지 컨설팅, 탄소중립 마을관리 등 준전문가형 노인 녹색일 자리를 창출, 탄소중립 전환의 피해자가 아닌 전환의 인력으로 배치
 - (산업별 숙련기술 승계) 산업별 고령·청년 도제형 기술승계 트랙을 신설하고, 고령 농업인 생활안전망과 청년농업인 농지·기술 이전을 결합한 농촌형 세대교체 모델을 구축
- **(실버산업 거점 조성)** 기술개발-인증-판로-인력양성을 통합 지원하는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맞춤형 의료용 식품·고령친화식품 실증 생태계와 노화융합 R&D 기반을 거점화
- **(활동적 노년 공략)** 고용과 교육, 건강과 여가문화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앙코르 거점' 단지와 돌봄·의료·주거·일 자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은퇴자마을을 조성하여 모든 노인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북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 (디지털 건강관리) 초개인화 건강관리와 연계, 노년층의 일-여가-건강 데이터 관리
 - (시니어 스포츠 산업화) 파크골프 수요를 시설 공급에서 산업으로 확장. 대회·동호회 리그 유치, 용품·의류·장비 지역 생산, 스포츠-치유-숙박을 묶은 시니어 스포츠 관광 상품을 개발



VII. 지역 캐피탈리즘 (Local Capitalism)

“일회성 지원에서 축적되는 자본으로, 지역이 투자주체가 되는 체감성장”

정의

- 지역이 보유한 햇빛·바람·토지·산업기반 등의 자산을 자본화하고, 주민·지자체·금융기관·기업 자본을 결합하여, 지역이 스스로 투자 주체가 됨으로써 수익의 실질적인 지역 귀속 효과를 높이고, 도민이 지표가 아니라 통장과 소득으로 성장을 체감하는 지역경제 운영방식
 - 지자체 성격이 재정을 배분하는 행정기관에서 자본을 운용하는 투자 주체로 이동하는 흐름을 의미하며, 한 번 집행 되면 소멸하는 보조금과 달리 자본은 배당·연금 형태로 매년 회수된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
 - ‘받는 지역’에서 ‘갖는 지역’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투자가 유치되어도 도민 체감은 0에 수렴

배경

- **(지역순환경제 부상)** 국제적으로 공공조달·협동조합·주민 지분 참여로 주요 자산의 소유구조를 전환하고 성장 과정의 부가가치를 지역에 남기는 지역순환경제 확산. 국내도 보조금 중심에서 지역자산을 활용한 투자금융·수익 환류의 영역이 확대되며 지역 주도적 성장전략이 확산
 - 지역에 사업성 평가와 투자구조·위험분담 설계 역량이 새롭게 요구되며, 역량을 갖추지 못한 지역은 전환 국면에서 재원 접근 자체가 제한
- **(전력계통 포화로 에너지소득 확산 지연)** 전북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햇빛·바람소득마을을 체감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고 있으나, 호남권 송배전망의 구조적 포화와 계통 접속 차단으로 발전 설비를 짓더라도 생산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송전선로의 물리적 확보가 어려움
 - 1차 공모 선정된 17곳 햇빛소득마을 중 16곳이 계통포화지역으로 선정되고도 즉각적 사업 추진 곤란
- **(역외로 유출되는 지역 자본)** 기업유치·공공투자의 효과가 지역에 충분히 축적되지 못해 청년 순유출의 확대에 이어지고 있고, 지역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라 투자 규모와 도민 체감 사이의 괴리 발생
- **(흔들리는 녹색금융 생태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국 최상위의 자원을 보유하고도 전력계통망 미 구축 및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 지연 등으로 기후위기대응기금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기금의 규모 역시 축소되는 등 녹색금융 생태계가 여전히 제한적이며, 지역의 자산에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계
- **(생산적 금융 인프라)** 전북은 1,000억 원 규모로 지역성장펀드 제1호 펀드를 결성·출범하였고, 제3 금융중심지 추진(연기금 자산운용, 농생명금융, 기후에너지금융), 핀테크육성지구 조성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국민성장 펀드 및 지역활성화 펀드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화 기술·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혁신금융생태계를 조성 중

대응
방향

- **(전북 체감성장 선도기관 설립)**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산업·도민에게 환류하는 투자플랫폼형 기관 설립을 추진하며, 신설에 앞서 도내 기업지원 기관과의 협업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 금융투자모델 마련
 - (투자 역량·성과관리) 단기 집행실적 중심의 성과관리가 모험자본·인내자본의 장기투자 유인을 제약해온 만큼, 투자 회수기간을 반영한 다년도 성과체계로 전환하고, 심사·사후관리 등 투자 역량을 축적하여 지역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는 정책·제도 기반 마련
- **(에너지 이익공유 확산을 위한 계통)** 전북의 재생에너지 거점 및 햇빛소득마을 등 에너지 이익공유 확산을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공용 배전망 ESS 저장장치 확대, 자산지소형 에너지 소비기업 유치, 국가 차원의 기간전력망의 신속한 구축 등의 종합적 추진 필요
 - 송전망 인근 마을에 에너지 소득마을 우선 배정, 계통소득모델 도입 등을 통해 송전망에 대한 도민 수용성(고창군 성송면 사례 확산·신고창변전소 주민찬성 및 유치) 확보
- **(녹색·디지털 금융 거점)** 온실가스 감축·순환경제·생태복원 사업에 지역 펀드를 투자의 마중물로 삼아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고 핀테크육성지구를 기관 이전 중심에서 디지털 금융 실증·기업·인력 거점으로 전환해 AI 연계 금융자산운용 및 투자 역량 확보
- **(지역 내 자본순환)** 지역 투자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임대료·운용수익을 개인배당, 공동체기금, 지역재투자 등으로 배분하고, 이를 다시 지역기업과 상권으로 되돌리는 순환구조를 설계
- **(소유구조 전환 수단 확대)** 주민 지분 참여와 함께,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자산 인수·지분 참여를 지원하는 전환금융(인수자금 융자·보증)을 마련하여 소유구조 전환 경로 다변화를 통한 성장 경로 확보
- **(체감 지표 도입)** ‘통장으로 체감’이라는 정의 기준과 성과관리를 일치시켜야 하며, 성과 지표로 도민 1인당 이익공유 수령액, 배당 수혜 가구·마을 수, 배당금의 역내 재소비율 등을 개발하여 적용

지역 캐피탈리즘
(Local Capitalism)

“보조금은 일회성, 지분은 매년 연금으로 돌아온다”



VIII. Medi 융합 (Medi-Convergence)

“새로운 ‘Medi 전복’을 위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정의

- 의료 분야가 진료·치료라는 고유 영역에 머물지 않고, 농식품·바이오·관광·산림·문화·해양 자원 등과 결합함으로써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먹는 것, 머무는 곳, 쉬는 방식)이 모두 건강 서비스의 구성요소로 편입. 보유 자원의 건강 가치로의 전환 역량이 지역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 밥상에는 메디푸드, 화면에는 디지털 치유 콘텐츠, 들·숲·바다에는 치유서비스가 결합되면서 의료 경쟁력의 기준 자체가 병상과 전문의에서 자원의 결합 역량으로 이동
 - 농업·산림·해양·문화를 모두 보유하고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는 자원의 우수성을 갖춘 전복이 여전히 의료가 약한 지역으로 분류된다면, 그 원인은 치유 자원의 부재가 아니라 활용 및 결합의 실패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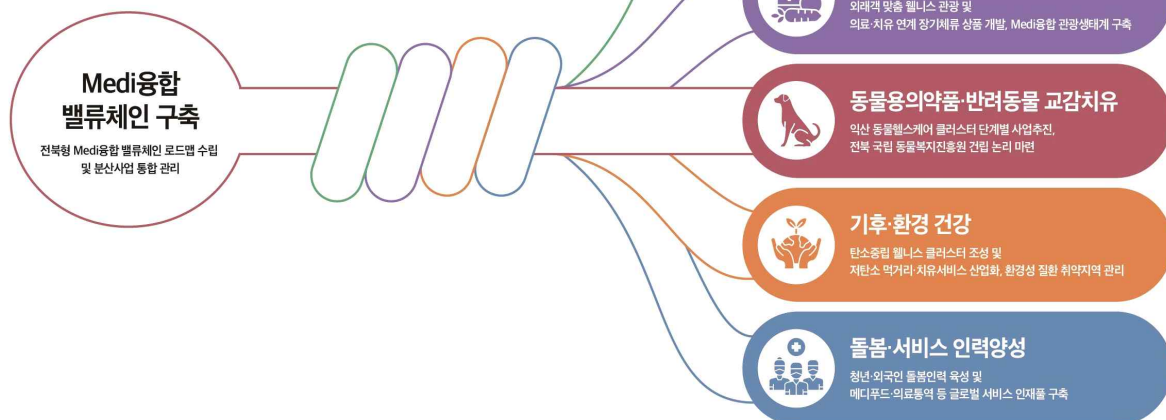
- **(끓어진 가치사슬)** 각 단계의 자원과 기관은 모두 도내에 존재하나, 이를 하나의 사슬로 잇는 주체와 설계가 부재. 결합의 부재가 곧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로 이어짐. 의료적 효과를 위한 생산-소재-제품-서비스를 잇는 가치사슬 설계와 이를 총괄할 주체 확보가 필요
- **(보유하되, 연결되지 않은 치유·웰니스 자원)** 치유관광 거점과 기반은 확충하였으나, 각 부서·각 사업으로 분산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되지 못한 상태가 전복 문제의 본질
 -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육성 사업지 6곳(대구·부산·인천·강원·전북·충북)에 포함되고, 치유농업·산림복지·산림치유·해양치유 정책을 각각 추진하지만, 개별 자원의 발굴·지정·시설 구축 중심으로 추진돼 자원 간 연계와 체류형 상품화는 미흡
- **(식품·바이오와 Medi 융합의 풍부한 기반)**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2026~2028)의 전복 지정, 국가 식품클러스터 2단계 추진, 의료용 식품법 발의에 따른 새만금 의료용 식품산업 단지 조성 검토 등 식품과 의료가 융합되는 기반을 확충할 예정. 그린바이오 육성, 발효미생물·천연물 소재 상용화와 연구 개발특구(농생명융합)를 운영하고, 천연물·기능성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첨단의료기기·고령친화산업 등 융복합 바이오헬스 R&D·기업 지원을 추진
- **(메디컬 푸드)** 특수의료용도식품(표준형, 맞춤형, 식단형)으로 구분되었던 의료용 식품은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산업으로서의 기반 조성과 함께 제약·식품기업과 의약, 약학,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관련 대학들과 공동으로 후보물질 발굴과 제품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
- **(동물용 의약품)** 육산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효능·안전성 평가, 시제품 생산, 임상시험 등 제품 개발 지원과 병원체 수집·분양 기능을 갖춘 바이오 팩토리 구축이 추진
- **(반려동물 교감 치유)** 국정과제에 언급되었던 동물복지진흥원 건립 추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통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보호, 돌봄 등을 포함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관 설립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7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

대응
방향

- **(Medi 융합 관련 식품·농생명 산업화)**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에 선제 대응하고 기능성식품 규제자유 특구 실증성과의 전국 제도화와 연계. 도내 특용작물의 기능성 물질 검증으로 의료용 식품 전환을 검토하고 약용작물·기능성 원료 계약재배로 농가 신규 수익원 창출
 - (치유관광산업지구) 산림·해양·정원 등 자연자원과 치유 시설, 전문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고 융복합하여 특화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 **(체류형 건강관광)** 단순 체험형 거점을 전문성·차별성을 갖춘 체류형 건강관광 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치유자원·음식·농생명·바이오·의료서비스를 연계한 치유·의료·체류의 Medi 융합 관광생태계로 전환
- **(메디컬 푸드)** 질병·질환 대응 품목 개발을 위한 연구, 후보물질 발굴과 생산을 위한 기업 육성, 연구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시군 보유 특화작물의 기능성 물질의 의료용 식품화 추진
- **(동물용 의약품)** 전북 익산에 조성 중인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의 단계별 사업과 연계하여, 준공된 효능·안전성 검증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시제품 생산시설, 임상시험센터를 포함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정책적 지원
- **(반려동물 교감치유)** 전북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자원을 활용하여 전북에 국립동물복지진흥원 건립을 위한 정책적 논리 확보. 반려동물 교감치유 생태계를 위한 기반 구축 추진
- **(기후·환경 건강)** 친환경 농식품·치유자원과 바이오·관광을 연계한 '전북형 탄소중립 웰니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저탄소 먹거리 보상 제도와 산림·갯벌·하천 기반 치유서비스 산업화, 환경성 질환 데이터 연계 환경보건 취약지역 관리를 병행
- **(돌봄·서비스 인력양성)** 인력 기반 없이는 어떤 융합 모델도 작동하지 않는 만큼 청년 일자리 트랙과 처우·경력 경로를 병행 마련하고, 지역대학-요양기관 연계 외국인 돌봄인력 정착 경로와 메디푸드·의료통역 등 글로벌 서비스 인재풀을 육성
- **(R&D 주체 연계)** 연구개발특구(농생명융합)·도내 출연연·대학·병원 등 밸류체인 소재 단계 담당 주체의 연계를 통한 기능성 물질 검증-임상-인체적용시험-인증으로 이어지는 공동 지원 체계 구축

Medi 융합 (Medi-Convergence)

“새로운 ‘Medi 전북’을 위한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IX. 마이너 라이징 (Minor Rising)

“마이너의 부상을 먼저 읽는 지역이 다음 시장을 갖는다”

정의

- **액티브 시니어, 스포츠 여성, 경계선지능인 등** 주류가 아니거나 정책의 시야 밖에 있던 대상이 시장과 사회의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소비시장이자 정책 대상으로 자리 잡는 현상
- 이들은 정책적 관심에서 더는 마이너가 아니며, 보호의 대상이자 산업의 수요라는 이중성을 지님

배경

- **(평균 밖의 사람들)** 인구구조 변화와 초개인화로 다문화·고령층·고립은둔청년·가족돌봄청년 등 제도 밖 집단이 가시화됨. 전북은 65세 이상 인구 26.61%, 다문화학생 비중 전국 평균 상회, 11개 시군이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해당해 비정형 정책수요가 큰 지역으로, '평균 대상 정책'의 적용 범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좁아지는 지역
- **(신규 수요층 산업)** 메디컬 푸드·웰니스 푸드 연구개발 부족으로 시장 선점 기회가 제한되는 가운데, 액티브 시니어·독거노인·정신건강 취약계층 등 신규 바이오헬스 수요층 대응 R&D와 기업지원 필요. 여성 스포츠 등 독립적 수익 구조를 갖춘 산업이 성장 추세
 - (액티브 시니어) 잠재 시장 규모는 최상위권이나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초기 단계이며, 시장의 중심도 기능·배려에서 경험·취향으로 이동. 그러나 관광정책이 일반 가족·단체 수요 중심이고 고령층을 수동적 관광객으로 보는 접근이 강해 스스로 여행을 계획·소비하는 능동적 관광 주체로 부상한 액티브 시니어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움
 - (여성 스포츠) 여성의 스포츠 참여·관람·팬덤이 확대되며 독립적 수익구조를 갖춘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전북은 스포츠 산업·정책이 활발해지는 데 비해 여성 스포츠 관련 산업 육성전략이 부재.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국면에 진입하지 못하면 후발 진입 비용이 급증
- **(새로운 사회적 약자)** 기존 제도의 분류 체계에 포착되지 않던 집단이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가시화됨과 동시에 정책의 중요한 수요자로 부상
 - (이민 2세대·이주노동자) 전체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비중이 지속 증가한 만큼 이들의 언어·학업·진로·정서 지원과 다문화가정·계절근로자의 주거·인권 보호 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나 지원체계는 미흡. 이들이 전북의 미래 생산연령인구라는 점에서 지원 공백은 인구 전략의 공백과 동일
 - (사회적 고립·관계단절 위험자) 비친족가구는 2015년 7,840가구에서 2023년 16,324가구로 약 2.1배 증가(전체 가구의 2.1%)하는 등 전통적 가족관계 밖의 다양한 가구형태가 빠르게 확대. 법적 가족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실질 교류와 돌봄이 단절되어 고독사나 무연고사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른바 '사회적 무연고' 상태와 반려동물 등이 사실상 유일한 정서적 관계망으로 기능하는 고립가구 등 새로운 형태의 관계 취약계층도 증가
 - (고립·은둔 청년) 도내의 고립·은둔 청년은 약 1만 8,200명(19~39세의 5.0%) 수준이나, 전담 지원기관은 전북청년미래센터 1곳에 불과. 특히 청년인구의 74.5%가 전주·익산·군산에 집중된 반면 장수·진안·순창 등 군지역은 청년 규모와 관련 서비스 기반이 도시에 비해 현저히 취약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조기 발굴과 상담·회복지원의 접근성 자체가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화

대응
방향

- **(신규 수요층 산업의 기반 확충)** 스포츠 여성, 액티브 시니어 등 새로운 수요 계층이 확대됨에 따라 전북에서도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신산업 기반 확충
 - (여성 스포츠 산업) 팬덤·스폰서십 생태계 조성, 여성 선수 브랜드 육성, 여성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체육시설 설치·운영 기준 마련. 여성 프로·실업팀 유치, 여성 종목 전국 규모 대회 개최, 경기장 접근성·안전 기준 마련을 통해 여성 스포츠 관람 시장 육성
 - (신규 바이오헬스 산업) 맞춤형 케어푸드 R&D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액티브 시니어·독거노인·정신건강 취약 계층 등 신규 바이오헬스 수요층 대상 기술 R&D·실증과 산업화 지원 확대
 - (액티브 시니어 관광) 건강상태·소득·취향·동행 형태에 따라 세분화하고 걷기·음식·역사·공예·웰니스·학습을 결합한 목적형·소규모·체류형 상품을 개발. 배려 대상이 아니라 시간·경험·소비력을 갖춘 관광시장으로 접근
- **(새로운 사회적 약자 맞춤형 정책)** 새로운 사회적 약자 집단의 등장에 따라 전북 내 이들의 규모와 실태를 분석하고,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 마련
 - (이민 2세대·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을 넘어 학업·진로·정서·사회관계를 연계하는 성장지원체계와 생활실태 정기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다문화 영농 정착과 이주노동자 주거·생활여건 개선 병행
 - (고립 고령층) 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고립 상태 그 자체'를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고독사예방법」과 「1인가구 지원 조례」 사항을 통합·확장. 예를 들어, 슈퍼마켓·미용실·동네 의원 등 '생명지킴이' 점포 지정, 장례·유품·재산을 미리 정하는 '종활(終活) 지원사업' 도입, 반려동물 임시보호·인계를 고독사·통합돌봄 계획에 포함
 - (고립 청년) 권역 거점 확충. 청년 인구가 적은 시군에는 순화·온라인 상담과 시군 협업거점 배치로 거주지에 따른 접근성 격차 해소. 발굴·초기상담·관계회복·사회복귀로 이어지는 단계 프로그램 추진
 - (경계선지능인) 도내 경계선지능인 규모·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학령기 학습 지원, 전환기 진로·직업훈련, 성인기 자립·고용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마이너 라이징(Minor Rising)

“마이너의 부상을 먼저 읽는 지역이 다음 시장을 갖는다”



X. AI 넥서스 (AI-Nexus)

“하나의 사슬로 연결하지 않으면 AI 골든타임을 놓친다”

정의

- AI 경쟁력이 알고리즘과 모델 확보의 문제를 넘어, 전력·용수·데이터·부지·인재가 하나의 사슬(nexus)로 결합된 복합 인프라의 문제로 전환. 이들 자원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AI산업의 입지와 성장 경로를 결정하는 현상
 - 자원을 개별적으로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이를 하나의 유치 패키지로 꿰어내는 설계 역량이 경쟁력을 좌우하며, 입지 결정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급성이 특히 높음
 - 전북의 전력·용수·부지·인재를 한 줄로 연결하지 못하면 새만금 10GW는 타 지역 산업을 돌리는 발전소로 남고, 농생명·탄소·상용차 등 주력산업도 AI 전환에서 밀려 ‘한때 좋았던 산업’으로 기록될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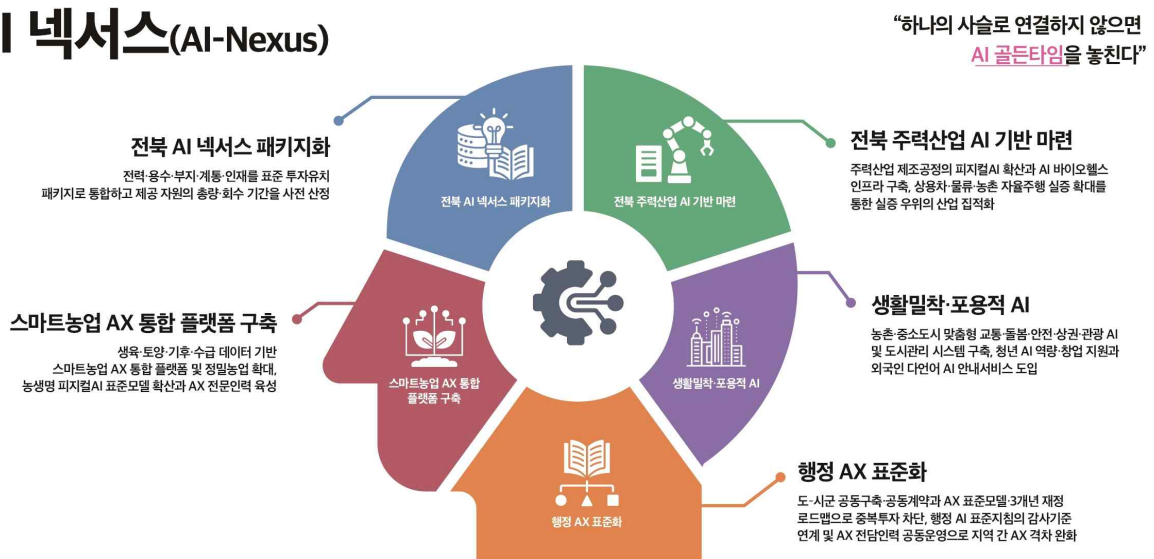
배경

- (자원이 곧 AI 경쟁력) AI 경쟁이 대규모·상시 전력을 요구하는 데이터센터 경쟁으로 전환되며 전력·용수·부지 등 지역의 기반자원이 산업 입지를 결정하는 핵심 조건으로 부상
 - AI는 전력·용수·계통·부지·통신망·주민수용성이 결합된 넥서스 산업으로, 지역이 이를 하나의 유치 패키지로 설계할 수 있는지가 경쟁력을 좌우
- (전북의 AI 골든타임) 대규모 기업투자와 국가계획 시점이 겹친 지금이 AI 전략 추진의 골든타임
 - (피지컬AI 거점) 새만금 AI밸리, 현대차그룹 투자, 피지컬AI 허브, 로봇파운드리 클러스터 로드맵 등 2026년을 AI 로봇산업 육성 원년으로 선포해 협업지는 기반 피지컬 AI 기술개발·실증시설 구축 추진
 - (전력·용수 자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약 9,833GWh로 전국 최상위이고 새만금 인근 7GW(10GW 확대 예정)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될 예정으로 AI데이터센터 등이 들어서기에 훌륭한 조건. AI·반도체 등 대규모 산업 유치 시에는 전력뿐 아니라 물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큰 걸림돌을 피할 수 있음. 전기가 많다고 기업이 오는 것은 아니므로 물공급, 송전망, 공장부지, 전문인재를 하나로 묶은 맞춤형 종합 패키지 마련이 핵심 성공전략
 - (AI-Ready 데이터) 전북 빅데이터 허브·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 등을 기반으로 공공 데이터 개방·활용을 추진하나, AI-Ready 전환을 위한 세부 전략과 거버넌스는 초기 단계
 - (자율주행 상용화) 전국 최초 화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새만금북로, 2024.6)를 기반으로 2026년 7월 국내 첫 자율주행 화물 유상운송을 상용화(군산~전주~대전 118km, 주 3회). 전북이 전국 최초 실증에 성공한 대표사례로, 실증 우위를 산업 집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다음 과제
 - (스마트농업) 남원·김제시 등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정밀농업·자율주행 농기계 연구개발·테스트베드 등을 추진 중이며, 주력산업인 농생명분야의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인력 육성이 핵심 과제
 - (산업·환경 AX 적용) AI기반 바이오 소재 발굴, AI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와 케어푸드·기능성식품·미생물 바이오 등 농생명바이오 전반의 AX·R&D 지원을 추진. AI를 활용한 온실가스 관리·물순환·대기·폐기물·생태자원 등 환경관리 정책수요도 증가
 - (행정 AX의 격차) 도는 자체 생성형 AI 행정시스템을 시작(2025.12)해 3개월 만에 누적 질문 10만 건, 본청 사용률 90%를 기록하고 14개 시군 확대 추진 중. 도·시군 간 인력·예산 격차로 도입 속도와 활용 수준의 격차, 이른바 ‘AX 디바이드’(AI 전환 격차)가 구조화될 위험. 부서별·공모사업 중심 추진에 따른 중복투자·재원 단절 위험이 상존.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과 행안부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등 중앙기준은 마련되었으나 AI오류·책임·검증에 관한 지자체 내부통제(감사·기록·책임) 기준으로는 내재화되지 않아 현장 도입도 지연

대응
방향

- **(전북 AI 넥서스 패키지화)** 전력·용수·데이터·부지·인재를 하나의 표준 투자유치 패키지로 구성하고, 제공 자원의 총량과 회수 기간을 사전 산정
 - (에너지·용수·환경) 에너지를 AI 데이터센터 입지 결정의 핵심요소로 보고 자산지소·직결형 분산전원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ESS·스마트그리드 연계 자산지소 모델 실증. 물 소비량·재이용률을 반영한 스마트워터그리드와 전북형 AI 환경관리 플랫폼 구축
 - (AI-Ready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AI-Ready 전환(표준화, 라벨링, 품질 등급제) 기준을 마련하고, 농생명·에너지·모빌리티 등 전북 주력 분야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자산화. 데이터거버넌스 전담 기능과 도·시군·공공기관 데이터 연계 체계를 구축
 - (핵심 인재 확보) 도내 대학의 AI 관련 학과 정원·교육과정 개편, 앵커기업 채용 연계형 교육, 수도권 인재의 이주 거점 근무 지원 등
- **(전북 주력산업 AI 기반 마련)** 농기계·상용차 등 주력산업 제조공정에 피지컬AI를 확산하고 AI 기반 바이오헬스 R&D·실증 인프라를 구축. 상용차·물류 자율주행 실증벨트를 확대(실증 특례 연계)하고 농촌 DRT 자율주행 셔틀 실증을 선점해 실증 우위를 산업 집적으로 전환
- **(스마트농업 AX 통합 플랫폼 구축)** 생육·토양·기후·수급 데이터를 연계한 스마트농업 AX 통합 플랫폼 구축과 정밀농업 보급 확대, 자율주행 농기계·AI 수확 로봇 등 농생명 피지컬AI 표준모델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체계 구축
- **(행정 AX 표준화)** 도·시군 공동 구축, 공동 계약, 표준 모델 우선의 투자 기준과 3개년 AX 재정 로드맵으로 중복 투자를 차단하고, 행안부 범정부 AI 기반을 공통 활용. 행정AI 표준지침(검증·기록·책임·면책)을 적극행정 면책 제도 및 감사 기준과 연동. AX 전문임기제·전문경력관의 도·시군 공동 채용과 인사교류를 통한 순환 배치로 'AX 디바이드' 완화
- **(생활밀착·포용적 AI)** 농촌·중소도시 특성을 반영한 교통·돌봄·안전·상권·관광 AI 서비스와 AI 도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AI역량·창업 투자트랙 신설과 외국인 생활정보 다언어 AI안내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

AI 넥서스(AI-Nexus)



2026년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발간 목록

발행호	제목	주요 내용	책임자	QR
336호	2026년 전북연구원 10대 연구 아젠다	민선 8기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해, 도민경제·농생명산업·문화체육관광·균형발전·도민행복 5대 분야를 틀로 삼아 전북의 중장기 구조 전환과 미래 도약을 뒷받침할 전략과제를 확정한 연구 로드맵	이성재	
337호	새만금 1석 3조 국가 전략! 'K-무탄소 커플링 시티'로 구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대전환	항만·산단·재생에너지가 결합된 새만금을 도시 단위 탄소중립 실행 모델 'K-무탄소 커플링 시티'로 설계해 2027년 신항 개항 전 국가 표준 전환 모델로 격상하자는 제안	나정호	
338호	전북 '100년 유산' 이름 프로젝트	2031년 춘향제, 2033년 변산해수욕장 등 100주년을 맞는 전북의 근대 유산을 '기억에서 자본으로' 전환하는 「전북 100년 유산 이름 프로젝트」(기억의 자산화·가치의 재창조·지역의 활력화) 제안	장세길	
339호	전북 소상공인정책 '생존'을 넘어 '성장의길'로 대전환 필요하다	사회안전망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을 성장·육성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성장패키지 시범사업, 성장촉진자금, 전담조직 위상 강화,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과제 제시	김수은	
340호	전북 농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형 농업 숙련인력 육성 방안	농업계고(D-4-3)→농생명 전문대(D-2)→농생명기업 취업(E-7-M)→거주(F-2)로 이어지는 '전북형 정주형 농생명 숙련인력 패스웨이'를 설계해 농업 인력난과 농촌 정주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자는 제안	조원지	
341호	5극3특 체계의 전북자치도 대응방향: '속도의 경제'에 기반한 3S 전략	초광역 행정통합 확산에 따른 전략적 고립 위기에 맞서, 규모의 경제 대신 '속도의 경제'에 기반한 3S 전략(Seed·Straight·Spread)과 '국가발전 기여 논리'로의 제3차 전북특별법 개정 방향 제안	천지은	
342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지원 중심으로 전환하자	클러스터형 성숙기에 진입한 새만금 국가산단을 위해 법적기반·생태계·공간고도화·전담체계·기업지원의 5대 과제를 묶은 'LEAPS for 새만금' 프로젝트 제시	이지훈	
343호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성 진단 및 전략적 제고 방안	유치경쟁력지수 분석 결과 한국이 최상위 수준임을 확인하고, 유치위원회 초기 구성과 넷플릭스 올림픽·글로벌 스포츠 중심도시 장기계획·플랫폼형 올림픽의 3대 차별화 전략 제안	정은천	
344호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9대 공제회 유치전략과 이전효과 제고방안	기금운용본부 이전 후 수익률 상승 실증을 근거로, 국민연금 연계 자산운용 고도화·대체투자 플랫폼·회원서비스 강화·양자금융 실증의 4대 패키지와 기관별 맞춤형 이전모델 제안	김시백	
345호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2차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으로 완성된다	현대차그룹 9조 원 새만금 투자(재생에너지-AI데이터센터-수소-로봇)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민간투자자 전략적으로 연계하고 통합 캠퍼스로 집적하자는 제안	이지훈	
346호	새만금 신산업 유치에 따른 청년인구 유입정책 전략	첨단산업 집적만으로는 청년 정착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수변도시 청년주거단지·광역 정주 교통망·산업연계 단계별 정주체계의 3대 정책 방향 제시	이지선	
347호	출생아 1억원 자산형성 프로젝트 전북아이희망펀드	출생 시 부모·지자체 1:1 매칭 2,000만 원을 도내 혁신기업에 투자해 20세에 1억 원 자산 형성을 보장하고, 주거·창업·취업 연계 '포스트 1억 인센티브'로 청년 정주를 유도하는 펀드 제안	김동영	
348호	전북을 중심으로 하는 후백제역사문화권, K-컬처로 거듭나자	법정 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된 후백제를 'Smart Core, Global Link'전략 (디지털 왕도 복원·K-컬러 콘텐츠 육성·초광역 관광 생태계)으로 K-히스토리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자는 제안	장충희	
349호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 농생명 혁신체계의 마지막 연결고리	농촌진흥청·식품연구원·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 집적된 전북에 농협중앙회를 유치해 연구성과 확산·K-푸드 수출·농생명 금융의 3대 플랫폼으로 농생명산업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자는 제안	배균기	
350호	전북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의 이동 특성에 따른 정책방향	전북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를 생활권 중심형·도내 의존형·광역 유입형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계절 편중별 맞춤 정책과 데이터 기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방향 제시	이성재 이지선	
351호	전북 체감성장의 길, JB Road	전북기업의 제품이 세계시장까지 도달하도록 인프라·지원제도·국제항로·해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수출실행 모델 'JB Road'를 군산·석도 항로 기반 전북-산동 실증부터 단계적으로 확장하자는 제안	나정호	
352호	우리동네에 청년사장님을 모십니다	인구감소 면지역의 생활서비스 공백을 청년 기업가가 운영하는 '우리동네 복합편의점+α'로 메우는 프로젝트를 2027년 시범마을 3곳에서 2029년 10개 거점으로 확대하자는 제안	김동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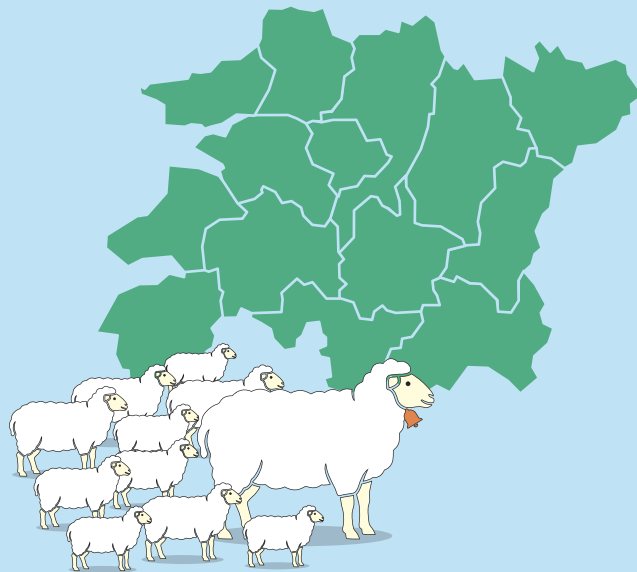
LOCAL TRENDS, JEONBUK 2027

BELLWETHER

벨웨더(BELLWETHER)는 무리를 이끄는 양이자, 시장과 정책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선행지표.

전북은 변화를 먼저 겪는 지역, 뒤쳐진 사례가 될 것인가, 앞서는 선례가 될 것인가.

2027년, 전북은 방울을 달 것인가?



Vol. 353
ISSUE BRIEFING
JTHINK



발행인 최 백 렬 발행처 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